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6월호 통권 제56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Ⅲ. 주택시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변동요인
Ⅳ. 소비자심리지수 변화와 소비전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6월호 통권 제56호

Contents

Ⅰ. 경제동향 4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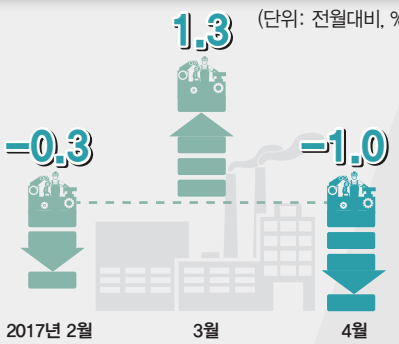
Ⅲ. 주택시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변동요인 33

Ⅳ. 소비자심리지수 변화와 소비전망 4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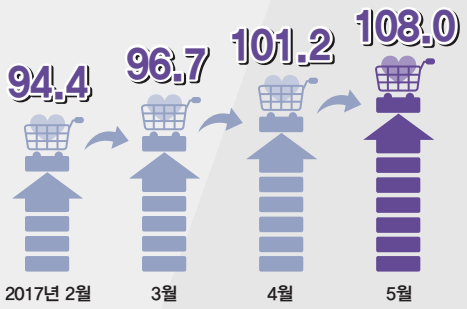
(단위: 전월대비, %)



산업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생산조정**과 전월 급등에 따른 반사효과로 감소

소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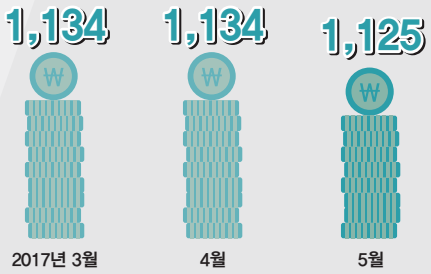
(단위: 지수)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와 정치적 불확실성완화** 등으로 **큰 폭 반등**

환 율

(단위: 원달러)



5월 중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확대**로 전월대비 9원 하락한 **1,125원 기록**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연락처
788-3775

I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나 수출과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지속

⊙ 4월 중 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반도체 ·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생산 조정으로 전월대비 감소(1.0%)를 기록

- 이에 따라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1%p 감소한 71.7%의 낮은 수준을 나타냄

⊙ 그러나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 관련 지표의 상승 등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

- 5월 중 수출은 반도체가 월간기준 사상 최대실적(79.9억 달러)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
- 4월 중 설비투자지수와 건설기성액은 전월대비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3월 중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 한편 소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나 4월 중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하고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4월(108.4) 이후 최고치인 108을 기록하여 최근 가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

5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소폭 오른 전년동월대비 2.0%를 기록(근원물가 등락률은 1.5%)

⊙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축산물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교통비(0.48%p)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확대, 미 달러화 강세기조 완화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5월 중 달러대비 원화 환율(월평균)은 전월(1,134원)대비 9원 하락한 1,125원, 국고채금리는 전월(1.68%)에 비해 1bp 상승한 1.69%를 시현

[표 1]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5	2016				2017			
	연간	연간	2Q	3Q	4Q	1Q	3월	4월	5월
전산업생산	1.9	2.9	3.2 (1.3)	3.0 (0.9)	3.4 (0.3)	3.9 (1.3)	4.1 (1.3)	3.5 (−1.0)	–
광공업생산	−0.3	1.0	0.7 (1.4)	0.5 (0.1)	2.7 (0.6)	3.7 (1.6)	3.3 (1.2)	1.7 (−2.2)	–
서비스업생산	2.9	3.0	3.5 (1.1)	3.6 (1.0)	2.1 (−0.3)	2.6 (0.9)	2.8 (0.3)	2.5 (0.1)	–
소매판매액	4.1	4.3	5.9 (2.0)	3.5 (−1.2)	2.5 (2.1)	2.0 (−0.4)	1.4 (−0.1)	2.8 (0.7)	–
설비투자지수	6.3	−1.3	0.6 (5.1)	−4.7 (−1.9)	5.9 (7.9)	18.0 (5.6)	23.3 (13.3)	14.1 (−4.0)	–
건설기성액(불변)	5.0	15.5	15.8 (2.3)	14.5 (4.2)	17.7 (4.1)	18.0 (6.0)	18.5 (3.8)	19.4 (−4.3)	–
수출(통관)	−8.0	−5.9	−6.7	−5.0	1.8	14.7	13.2	24.1	13.4
수입(통관)	−16.9	−6.9	−10.1	−5.1	4.1	23.9	27.7	17.3	18.2
경상수지(억달러)	1,059	987	263	215	255	196	57.5	40.0	–
실업률	3.6	3.8	3.8	3.6	3.2	4.3	4.2	4.2	3.6
취업자수(천명)	337	289	289	318	302	360	466	424	375
소비자물가	0.7	1.0	0.9	0.7	1.5	1.4	2.2	1.9	2.0
원/달러환율	1,131	1,160	1,163	1,120	1,159	1,153	1,134	1,134	1,125
국고채금리(3년)	1.79	1.44	1.42	1.26	1.55	1.67	1.71	1.68	1.69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광공업생산이 큰 폭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감소를 기록

- 4월 중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을 제외한 광공업, 건설업, 공공행정 생산이 모두 부진하며 전월대비 1.0% 감소(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9.2%), 자동차(−2.6%) 등 제조업(−2.2%)에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고 전기·가스·수도사업(−1.9%), 광업(−9.9%) 생산이 동반 부진을 보이며 전월대비 2.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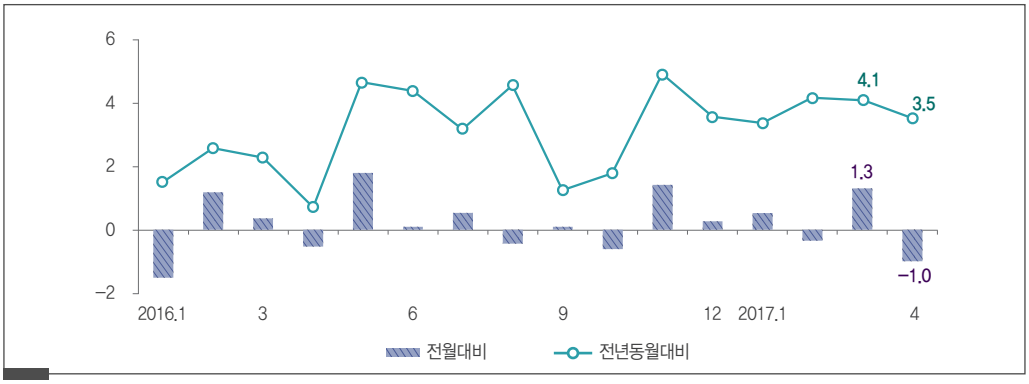
-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기술(−2.2%), 교육(−1.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0.7%), 금융·보험(0.7%) 등이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

- 4월 중 전산업생산의 감소는 반도체 생산 조정, 전월 급등(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 4월 중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산업생산 부진으로 전월비 1.1%p 감소한 71.7%의 낮은 수준을 기록

[그림 1]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 4월 중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보합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한 101.0을 나타냄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및 준내구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증가

- 4월 중 소매판매는 내구재(2.7%)와 준내구재(1.9%)판매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7%의 증가율을 기록

-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가전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감

– 가전제품 판매는 때 이른 더위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에어컨, 공기청정기 판매가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20.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하지만 승용차 판매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 신차효과 약화 등으로 전월대비 3.7% 감소

⊙ 반면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월대비 0.9% 감소

– 화장품은 중국관광객 감소[1]로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부진하여[2] 2015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전년동월대비 2.2% 증가에 그침

⊙ 5월 중 소매판매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승용차 내수판매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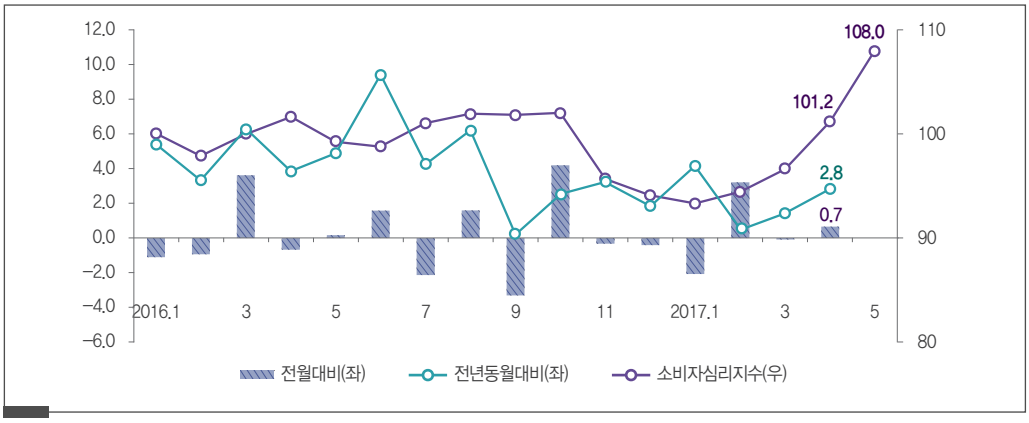
–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8.0을 기록하여 2014년 4월(108.4)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 ('17.2월)94.4 → (3월)96.7 → (4월)101.2 → (5월)108.0

– 자동차 내수판매 대수[3](전월대비,%): ('17.3월)21.8 → (4월)−3.7 → (5월)2.1

[그림 2]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에 따라 비주거용건축이 증가하였으나 토목투자의 위축으로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

⊙ 4월 중 건설기성액(불변, 전월대비)은 건축이 정체(0.1% 증가)되고 토목(−15.2%)이 큰 폭의 감소를 보임에 따라 4.3% 감소

1)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 중국 관광객은 전년동월대비 66.6% 감소

2)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중 면세점 외국인 이용객은 전월대비 19.2%, 매출액은 11.2% 각각 감소

3) 5월 자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잠정 속보치

⊙ 주거용 건축은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택인허가 및 착공물량의 감소로 점차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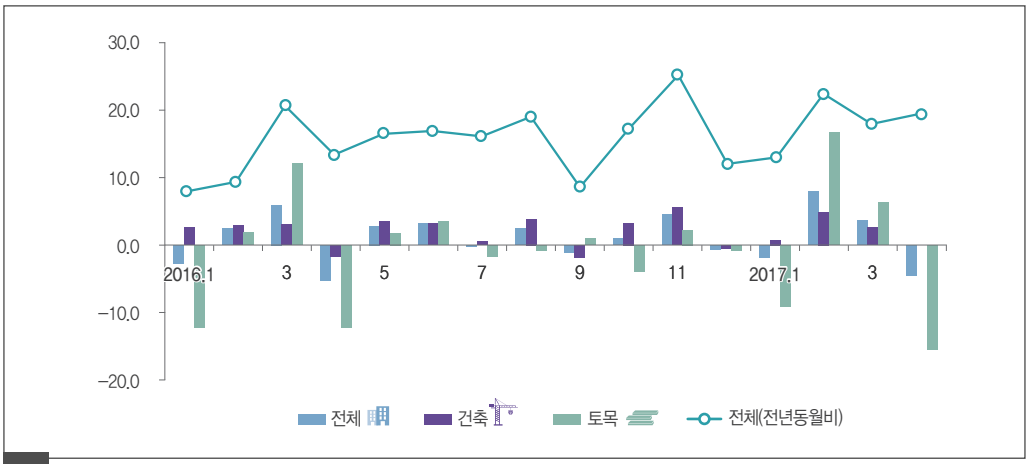
- 주택인허가(만호): ('16.1~4월)22.3 → ('17.1~4월)18.5
- 주택착공(만호): ('17.1월)2.7 → (2월)3.6 → (3월)3.7 → (4월)3.4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17.1월)33.2 → (2월)43.8 → (3월)41.3 → (4월)31.8

⊙ 다만 주택시장 소비심리와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이 상승하여 주택수요압력은 오히려 증대하는 모습

- 주택시장 규제 및 주택공급 감소 예상이 가계의 조기 청약을 자극한 것으로 보임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4]: ('17.1월)108.3 → (2월)112.3 → (3월)112.7 → (4월)113.1
-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16.3/4)72.0 → (4/4)85.8 → ('17.1/4)88.2

[그림 3] 공종별 건설기성액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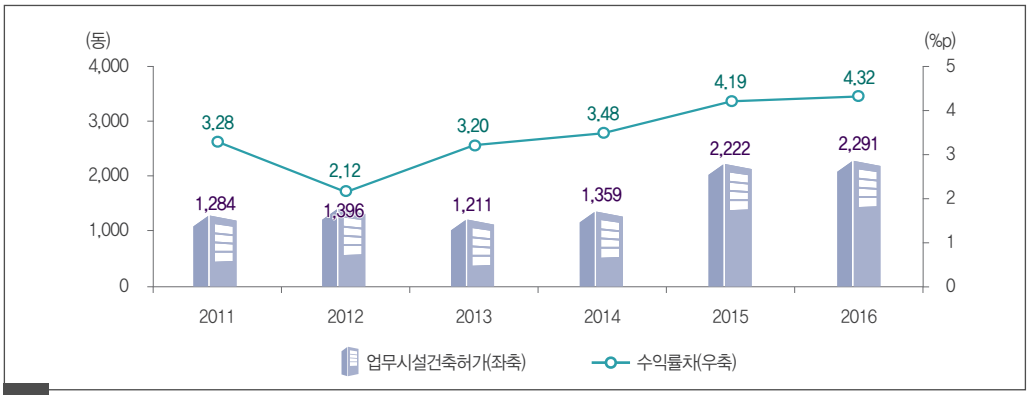
주: 선그래프는 전년동월비, 그 외는 전월비
자료: 통계청

⊙ 비주거용 건축은 경기회복기대에 따라 공장, 창고 등 상업·공업용건축이 확대

- 비주거용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17.1월)23.1 → (2월)27.7 → (3월)22.6 → (4월) 40.6
- 금융기관의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수익형 건물투자의 수익률 차가 확대됨에 따라 업무시설과 같은 수익형 건물건축이 증가

4)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

[그림 4] 업무시설 건축허가와 투자수익률차 추이



주: 수익률차=오피스투자수익률-은행저축성수신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감정원

⊙ 토목은 플랜트, 일반토목, 전기기계 등 대부분 둔화되었으며, 특히 토목건설을 주도했던 플랜트 건설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전기기계설치는 감소세를 지속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17.1월)49.9 → (2월)58.5 → (3월)27.7 → (4월)4.5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17.1월)-12.8 → (2월)4.8 → (3월)8.1 → (4월)5.3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17.1월)-49.4 → (2월)-35.1 → (3월)-36.9 → (4월)-15.0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4월 전월대비 70.1% 증가했으나 이는 전월 감소에 대한 반등의 성격이 강하며, 2016년 중반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건설투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택투자의 둔화세는 지속될 전망
- 건설수주(전월대비, %): ('17.1월)7.3→(2월)31.8→(3월)-42.1→(4월)70.1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류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하락세로 전환

⊙ 4월 중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는 일반기계류(-7.5) 및 정밀기계(-4.5) 등 기계류(-5.0%)와 자동차(-8.4) 등 운송장비(-1.4%)투자가 줄어 4.0% 감소

- 설비투자지수(전월비, %): ('17.2월)-8.5 → (3월)13.3 → (4월)-4.0
- 기계류(전월비, %): ('17.2월)-8.3 → (3월)13.2 → (4월)-5.0
- 운송장비(전월비, %): ('17.2월)-9.5 → (3월)13.9 → (4월)-1.4
- 단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전월에 이어 두 자릿수의 증가세(14.1%)를 지속

⊙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기계류내수출하, 국내기계수주 등은 증가세로 반전되었지만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은 증가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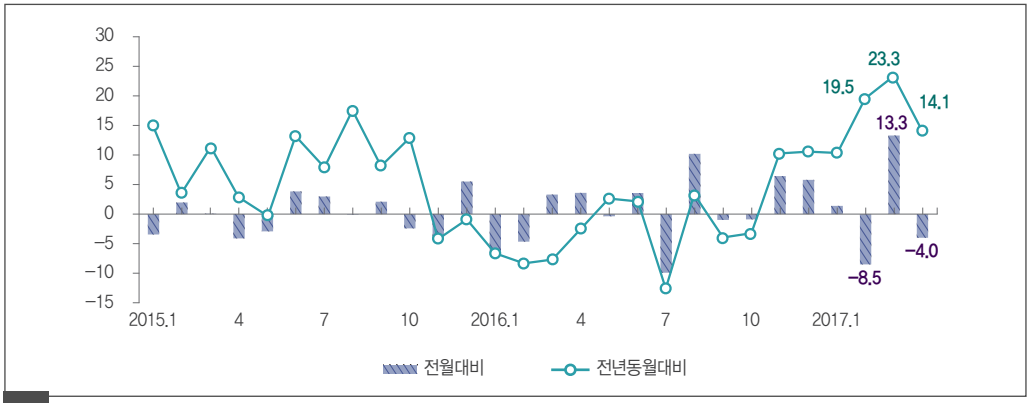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비,%): ('17.2월)−3.1 → (3월)−1.1 → (4월)2.4

– 국내기계수주(전월비,%): ('17.2월)31.4 → (3월)−0.3 → (4월)2.7

–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전년동월대비,%): ('17.2월)93.2 → (3월)151.3 → (4월)60.1

[그림 5]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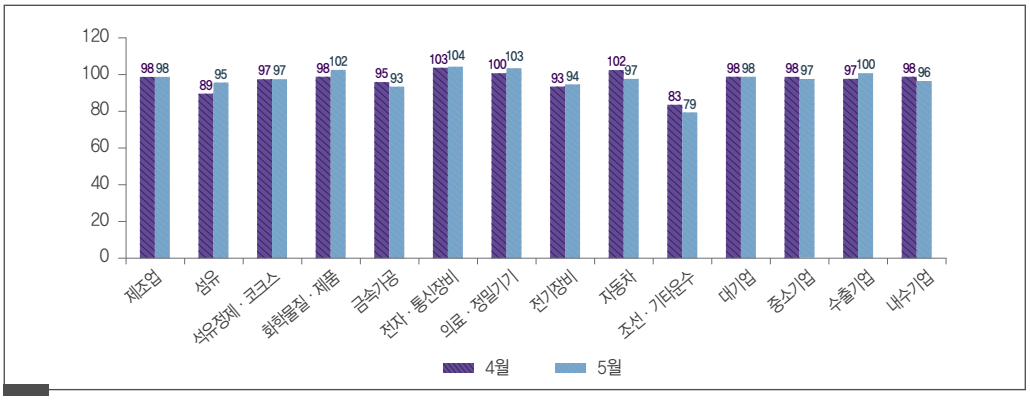
⊙ 업종별 설비투자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금속가공,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대기업 및 수출기업의 투자심리는 비교적 양호한 반면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의 경우 소폭 하락

–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 ('17.3월)95 → (4월)98 → (5월)98

– 수출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 ('17.3월)95 → (4월)97 → (5월)100

– 내수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 ('17.3월)96 → (4월)98 → (5월)96

[그림 6]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전망BSI



자료: 한국은행

수출은 반도체가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내는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

⊙ 5월 중 수출은 450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하여 금년 들어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

– 선박을 제외한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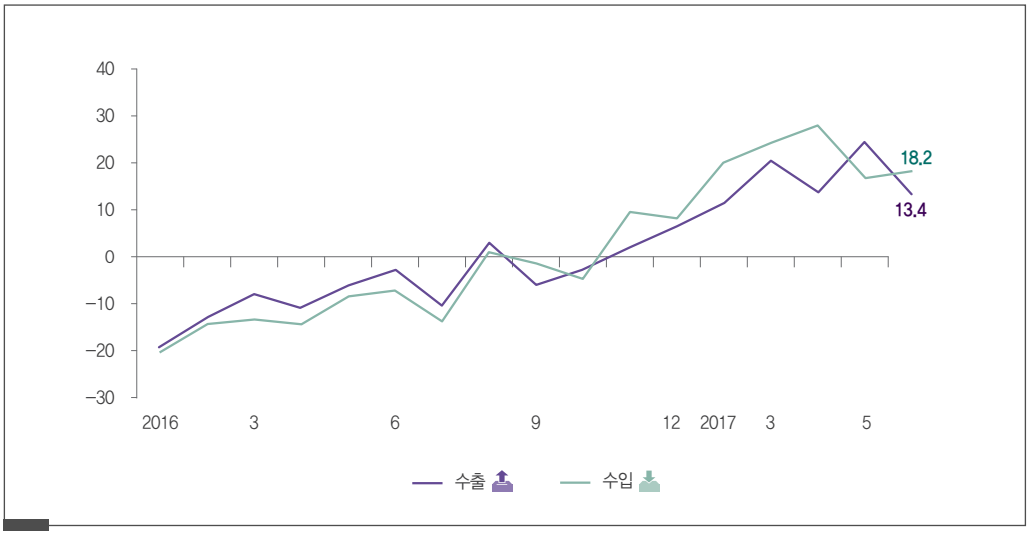
⊙ 수출금액을 물량 및 단가 요인으로 구분하면, 수출물량 증가율은 전월(–8.2%)의 일시적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6.4%) 전환하였으며, 수출단가 증가율은 지난해 12월 이후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6.6% 증가

– 수출물량(전년동월대비,%): ('17.2월)2.0 → (3월)5.8 → (4월)–8.2 → (5월)6.4

– 수출단가(전년동월대비,%): ('17.2월)17.8 → (3월)7.0 → (4월)35.2 → (5월)6.6

[그림 7] 수출과 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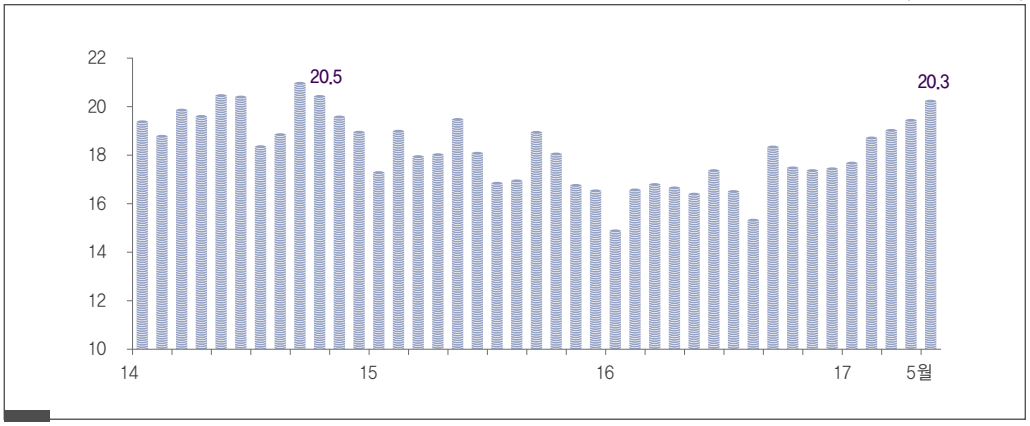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5월 중 일평균 수출금액은 21.4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금액은 20.3억 달러로 2014년 10월(20.5억 달러) 이후 처음 20억 달러를 초과

–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금액(억 달러): ('17.1월)17.7 → (2월)18.8 → (3월)19.1 → (4월)19.5 → (5월)20.3

[그림 8]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금액 추이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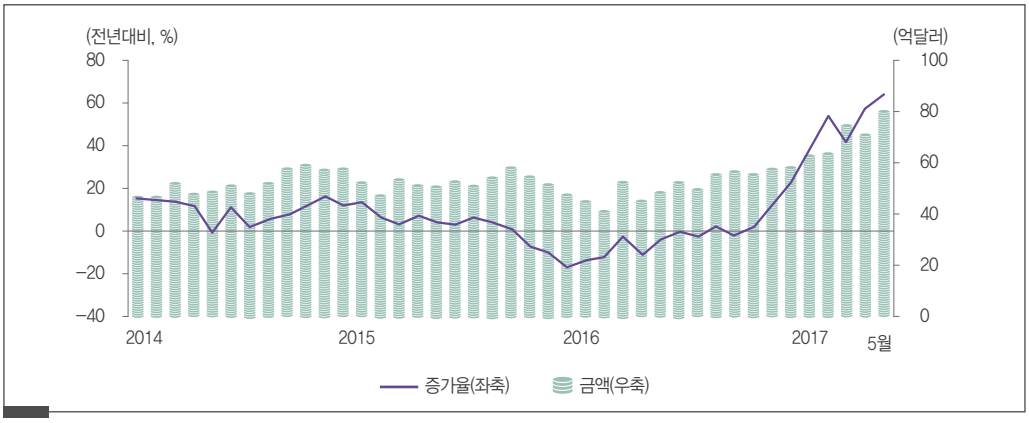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13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이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가전, 차부품, 섬유 등 4개 품목은 감소

-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상승, 스마트폰 고사양화에 따른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 등으로 월간 기준 최대 수출 실적인 79.9억 달러를 기록(전년동월대비 63.3% 증가)
- 이외 철강(36.5%), 석유제품(29.8%), 선박(27.5%), 석유화학(13.5%), 디스플레이(13.0%), 컴퓨터(8.9%), 일반기계(4.3%), 자동차(3.6%) 순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임
- 반면, 해외생산 비중이 늘어난 무선통신기기(-37.0%), 가전(-21.0%), 차부품(-12.4%), 섬유(-2.5%) 등은 감소

[그림 9]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별로는 베트남, 아세안, CIS, 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는 EU 수출이 증가했으나 미국 수출은 감소

- 대베트남(전년대비,%): ('17.2월)37.2 → (3월)55.6 → (4월)63.0 → (5월)56.9
- 대아세안(전년대비,%): ('17.2월)31.2 → (3월)42.8 → (4월)19.8 → (5월)36.0
- 대EU(전년대비,%): ('17.2월)27.4 → (3월)−9.0 → (4월)64.8 → (5월)21.9
- 대미국(전년대비,%): ('17.2월)1.7 → (3월)−5.2 → (4월)3.9 → (5월)−1.9

⊙ 5월 중 수입은 380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18.2%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가공단계별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자본재(31.5%), 원유 등 1차산품(29.9%), 메모리 등 중간재(9.4%), 가솔린차 등 소비재(2.3%)에서 모두 증가

⊙ 무역수지는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가율로 전월(130억 달러)보다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 60억 달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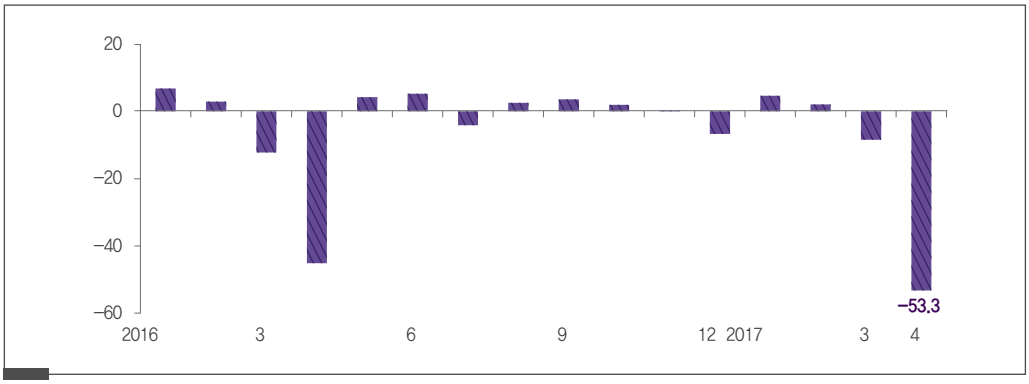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 확대되었으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흑자규모는 소폭 증가한 수준을 나타냄

⊙ 4월 중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37.6억 달러)보다 2.4억 달러 소폭 증가한 40.0억 달러를 시현

- 상품수지는 수출증가율(19.2%)이 수입증가율(18.6%)을 상회하며 전년동월(98.5억 달러)에 비해 20.8억 달러 증가한 119.3억 달러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전년동월(−15.3억 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된 −23.8억 달러를 나타냄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지급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40.6억 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되며 −50.3억 달러를 시현

[그림 10] 배당소득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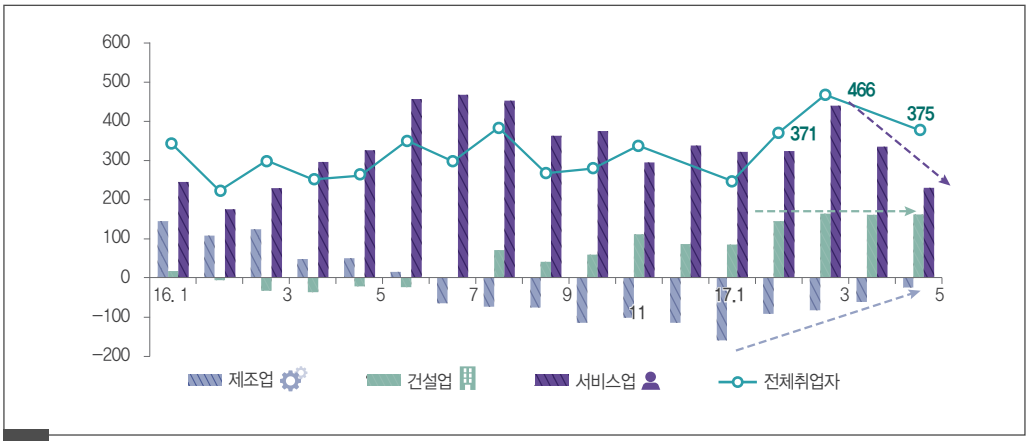
고용은 서비스업 증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감소세 완화와 건설업 호조세에 힘입어 전월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 유지

⊙ 5월 중 취업자수는 도소매업, 부동산업·임대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의 증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감소폭 축소와 건설업에서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37.5만명 증가

-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만명): 비농림어업 37.2(제조업 -2.5, 건설업 16.2, 서비스업 23.0), 농림어업 0.3
- 서비스업 고용은 교육서비스업(8.0만)에서는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부동산업 및 임대업(5.8만), 도소매업(5.2만)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
- 건설업 취업자수는 건설경기 호조세가 지속되며 3개월 연속 16만명 이상의 증가세 기록

[그림 11]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천명)



자료: 통계청

⊙ 임금근로자는 건설경기 호조로 일용직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무급가족종사자도 감소

- 일용직(전년대비, 만명): ('17.3월)5.8 → (4월)7.7 → (5월)13.0
- 자영업자(전년대비, 만명): ('17.3월)12.7 → (4월)10.5 → (5월)5.1

⊙ 5월 중 전체 실업률은 3.6%(계절조정 3.6%)로 전년동월에 비해 0.1%p 하락했으며, 청년실업률(15~29세)은 9.3%로 전년동월(9.7%)에 비해 0.4%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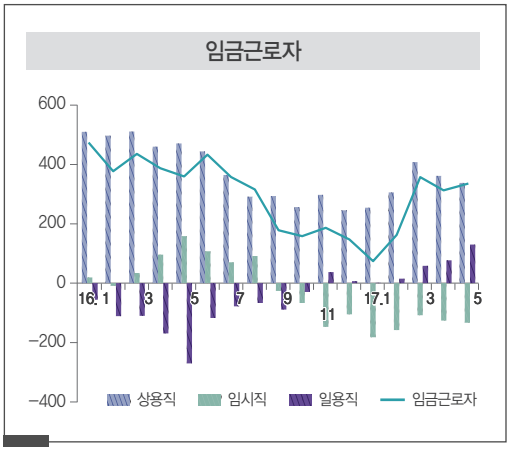
- 전체 실업률 증감(전년대비,%p): ('17.3월)-0.1 → (4월)0.3 → (5월)-0.1
- 청년실업률 증감(전년대비,%p): ('17.3월)-0.5 → (4월)0.3 → (5월)-0.4

⊙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에 비해 0.3%p 상승(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동월에 비해 0.7%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은 63.5%로 전년동월에 비해 0.3%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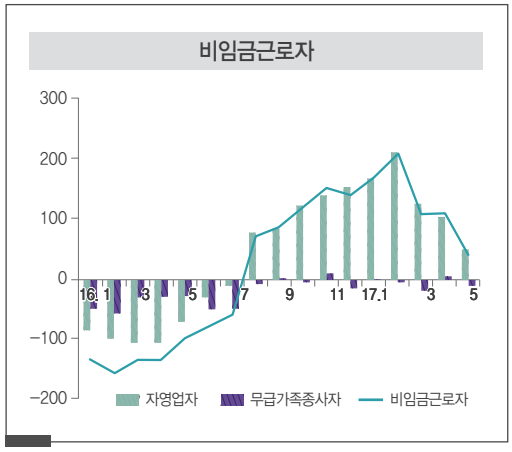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늘면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금년 5월까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여 동기간 남성 상승폭(0.2%p)의 3배에 달함

[그림 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감 추이

(단위: 전년대비, 천명)



(단위: 전년대비, 천명)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가격 및 교통비 상승에 기인하여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 5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0%를 기록하여 전월(1.9%)보다 0.1%p 상승

– 이는 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1.6%, 7.9%를 기록하고 석유류 가격도 전년동월비 8.9%를 나타낸 것에 기인

– 조류독감 현상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연근해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축·수산물 공급 감소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지출목적별 기여도는 교통(0.48%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47%p)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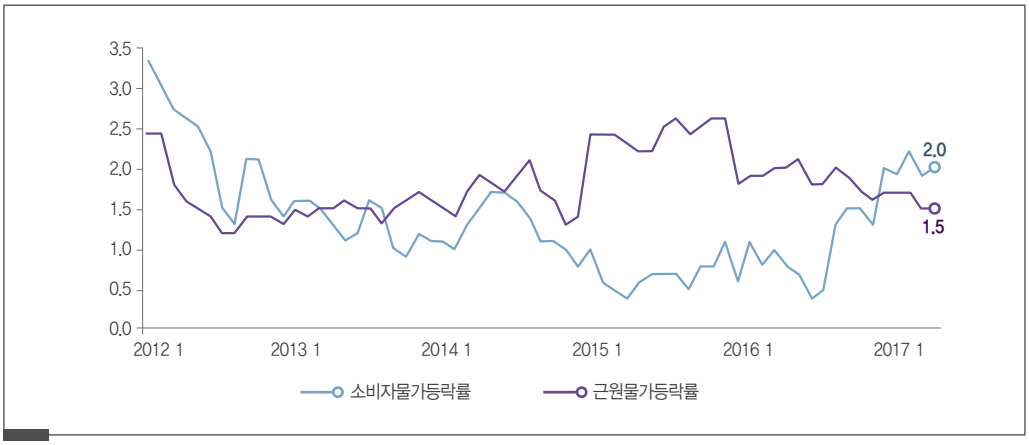
⊙ 품목성질별로는 상품가격이 전월에 비해 0.2%p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0%를 기록하였고 서비스가격 역시 전월에 비해 0.1%p 상승한 전년동월대비 2.0%를 나타냄

–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의해 상품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였고 전세 및 공동주택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서비스가격 상승을 주도

⊙ 근원물가등락률(식료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은 전월(1.5%)과 동일한 전년동월대비 1.5%를 나타내어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반영

[그림 13]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통계청

[표 2] 품목성질별 동향 및 기여도

(단위: 2015=100, %, %p)

	가중치	지수	등락률		기여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총지수	1000.0	102.80	0.1	2.0	0.14	1.97
– 상품	448.1	101.04	0.2	2.0	0.09	0.87
(농축수산물)	77.9	108.12	0.0	6.2	0.00	0.48
(공업제품)	325.8	100.79	0.2	1.4	0.06	0.45
(전기 · 수도 · 가스)	44.4	90.47	0.8	–1.6	0.03	–0.06
– 서비스	551.9	104.22	0.1	2.0	0.05	1.11
(집세)	93.2	103.48	0.2	1.8	0.02	0.17
(공공서비스)	145.1	102.54	0.1	1.1	0.01	0.16
(개인서비스)	313.6	105.22	0.1	2.4	0.02	0.78

자료: 통계청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5월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대내 · 외 불안요인이 감소하면서 전월(1.68%)에 비해 1bp 상승한 1.69%를 기록

- 조기대선 실시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해소 및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분석
- 다만,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물가 상승세에 기인하여 명목금리와 소비자물가상승률과의 차인 실질금리가 2017년 들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

⊙ 한편, 3년 만기 기준 회사채금리와 국고채금리의 차인 신용 스프레드는 지난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

- 고신용등급채권(AA−): ('17.3월)0.50%p → (4월)0.52%p → (5월)0.53%p
- 저신용등급채권(BBB−): ('17.3월)6.70%p → (4월)6.73%p → (5월)6.75%p

⊙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장 · 단기 국고채금리 스프레드가 2014년 수준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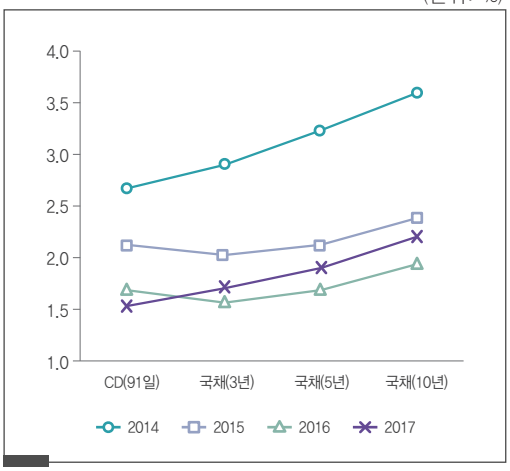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는 단기금리에 비해 미국 장기금리와의 동조화 경향이 뚜렷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14] 실질금리 변화추이

(단위: %)

[그림 15] 국고채 수익률 곡선 변화추이

(단위: %)



자료: 자료: 한국은행, FRB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통화정책 정상화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6월 15일(한국시각) 정례회의에서 목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1.00~1.25%로 결정

⊙ 연준은 단기적인 물가 하락추세에도 불구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가운데 경기의 견조한 회복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정책목표인 2.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시장은 향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보다 양호한 여건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또한, 별도의 발표문에서 연준 보유자산의 점진적 감축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 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을 공개

⊙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및 주택담보부증권(MBS) 등 보유자산을 재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4.5조 달러 규모의 자산규모를 향후 몇 년에 걸쳐 감축할 예정

- 최종 자산규모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당분간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을 시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규모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긴축적 통화정책의 유동성 회수효과가 증대될 전망

⊙ 단기시장금리 뿐 아니라 장기시장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기준금리 변화가 단기금리에 우선 영향을 미친 뒤 점진적으로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중앙은행 자산규모 변화는 장기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금리의 변화 속도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경우 미국으로의 자금쏠림현상에 의해 통화가치 하락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2013년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발언 이후 신흥국의 통화가치 및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긴축발작(Taper Tantrum) 현상이 발생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요인 존재

⊙ 미목표 기준금리 상한(1.25%)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수준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인상되었으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에 의해 충분히 예상되었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수준도 양호한 편으로 외화유출에 따른 위기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다만, 한·미 금리동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등 한계가구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잠재적 위험요인이 증대될 수 있음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회복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확대, 미 달러화 강세기조 완화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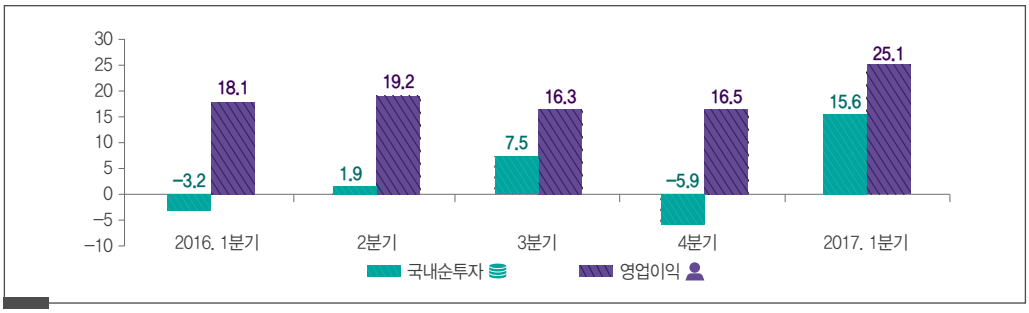
⊙ 5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25원으로 전월(1,134원) 대비 9원 하락

⊙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 및 기업수익 증가(거래소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금년 1분기 전년 동기대비 38.7% 증가)에 힘입어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자극

- 거래소 상장제조업 667개사 연결영업이익(조원): ('16.1/4)18.1 → ('17.1/4)25.1
- 외국인 국내증권순투자(조원): ('17.2월)6.0 → (3월)5.9 → (4월)2.5 → (5월)5.3

[그림 16] 상장사 영업이익 및 외국인 국내증권순투자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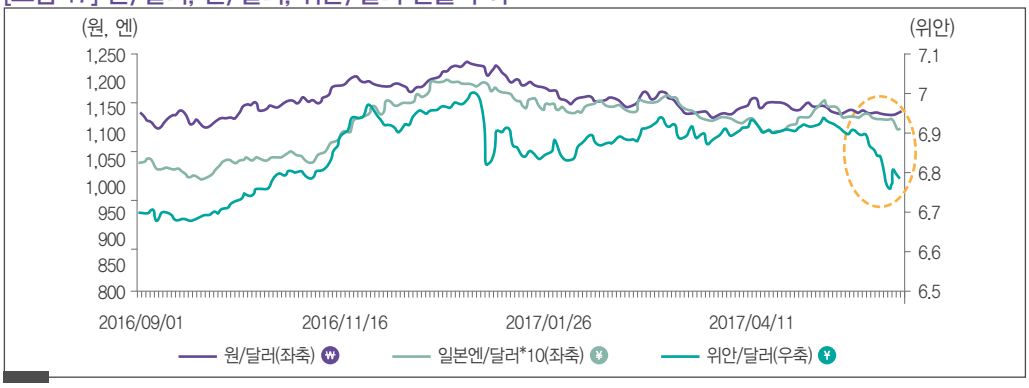


주: 국내증권순투자는 주식순매수, 채권순투자(순매수−만기상환)의 합
자료: 상장사협회, 금융감독원

⊙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기조의 완화에 기인하여 엔화 및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엔/달러(기말): ('17.2월)112.8 → (3월)111.8 → (4월)111.2 → (5월)110.8
- 위안/달러(기말): ('17.2월)6.859 → (3월)6.889 → (4월)6.898 → (5월)6.784

[그림 17] 원/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향후 원/달러 환율은 세계경제성장률 상승에 힘입어 수출 및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지속되고, 미 달러화의 강세기조 완화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미국 연준이 6월 15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양적축소를 예고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
-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전년대비,%): ('16년)3.1 → ('17년)3.5 → ('18년)3.6

Ⅱ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시사점

–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황종률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59**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최근에는 상승세로 전환되어 33%대에 근접하였고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644.4만명(32.8%)으로 유형별로는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2% 증가
  - 특히 시간제 일자리는 동기간 연평균 9.3% 증가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근로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여건이 취약한 근로계층 규모는 더욱 증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중고령층과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

- 중고령층이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단순노동과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에 진출
- 여성근로자가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 높음
  - 여성 비정규직은 2005년부터 남성을 추월하였고 최근 6년간 연평균 2.6% 증가(동기간 여성 시간제 비정규직은 연평균 6.9% 증가)
-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도 35%에 달하고 비정규직 규모도 최근 3년간 연평균 3.2% 증가
-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체 및 서비스업에서 시간제 비정규직이 가파르게 증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용안정화 대책이 필요

-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을 개선하고 사회보험의 법적인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서비스업 중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고령층, 청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필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공급 확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여성 및 중고령층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

01

비정규직 고용 현황 및 추이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시계열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의 성별 · 연령 계층별,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특성 및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

⊙ 통계청은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등을 조사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로 2003년부터 매년 1~2회(3월과 8월)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며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

-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

가. 비정규직 규모 및 유형별 현황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4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2014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33%대 근접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2016년 8월 기준 644.4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962.7만명의 32.8%를 차지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규모(만명): ('14)607.7 → ('15)627.1 → ('16)644.4
- 최근 3년간 연평균 2.7% 증가하여 정규직 근로자 증가율(연평균 2.4%)을 상회

⊙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7.0%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2014년 이후 소폭 상승하면서 33%대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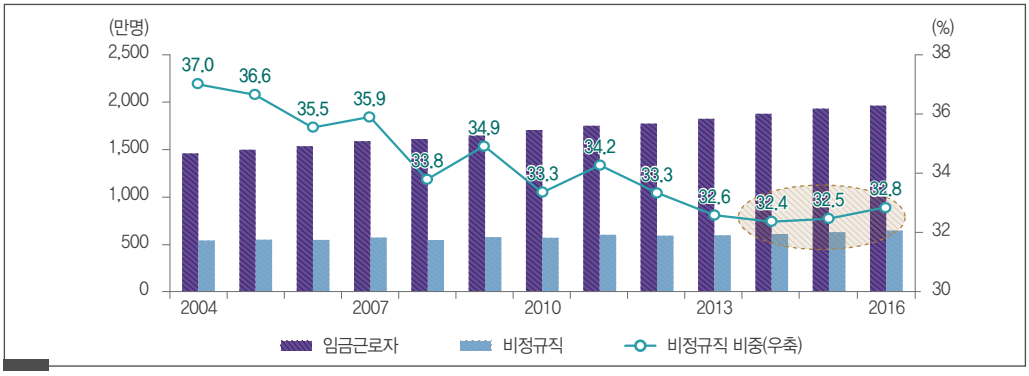
비정규직 유형별로는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

⊙ 비정규직 중 각 유형별 규모는 2016년 8월 기준 한시적 근로자 365.7만명(56.8%), 시간제 근로자 248.3만명(38.6%), 비전형 근로자 222.0만명(34.5%) 순으로 나타남[1)]

⊙ 한시적과 비전형 근로자는 최근 6년간(2011~16년) 연평균 각각 1.8%, –0.4%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동기간 연평균 7.4% 증가

– 2015년부터 시간제 근로자 규모가 비전형 근로자 규모를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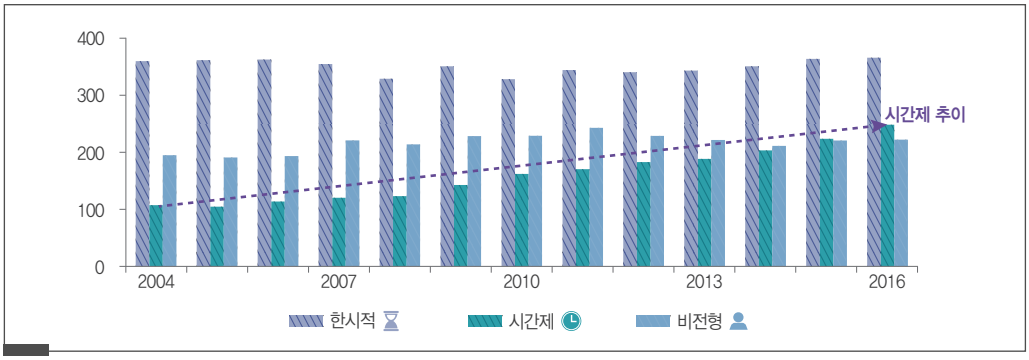
[그림 1]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추이



주: 매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만명)



주: 매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1)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하며,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 중복인원은 191.6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29.9%에 해당함

나. 비정규직 규모의 국제비교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임시직(temporary worker)'과 '영구직(permanent worker)'으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음[2)]

⊙ 비정규직(non-regular job)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일 근로자' 자료(매년 8월 기준) 기준으로 OECD에 제공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기간제 근로자 중 반복갱신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는 제외한 개념

⊙ OECD에 제공하는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임시직의 규모(2015년 8월 기준)는 430.3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2.3%에 달함

-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시직 비중(%): ('13)25.7 → ('14)21.6 → ('15)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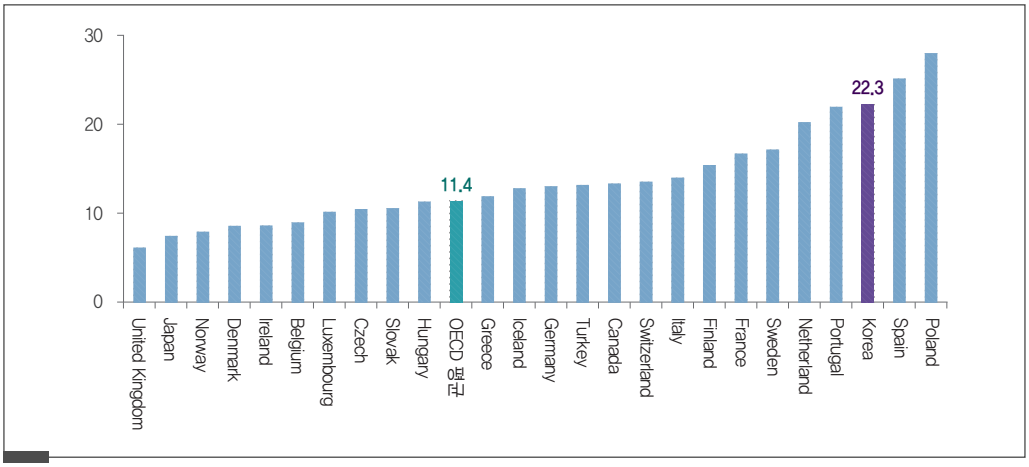
우리나라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2015년 기준)은 OECD평균의 2배에 달하며 전체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

⊙ OECD 주요국의 임시직 근로자 비중(2015년 기준, %): 영국 6.2, 일본 7.5, 독일 13.1, 캐나다 13.4, 프랑스 16.7, 스페인 25.1, 폴란드 28.0, OECD 평균 11.4

-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25.1%)과 폴란드(28.0%)

[그림 3] OECD국가의 비정규직 임시직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자료: OECD StatExtracts

2)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in OECD Countries: Sources, Coverage, and Definition"(2016)

02

비정규직 고용의 성별 · 연령계층별 특성

성별로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남녀 간 비정규직 비중 갭이 확대되는 추세

⊙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남녀 비정규직 비중 갭이 최근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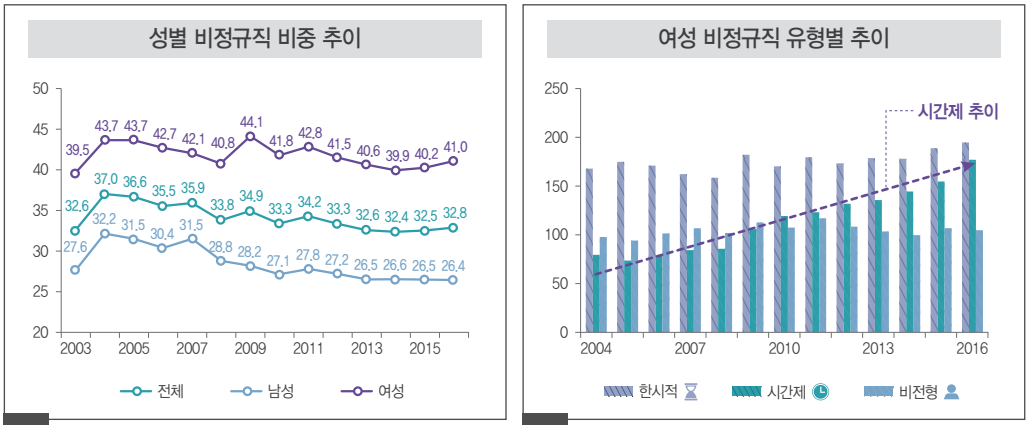
- 여성 비정규직은 2016년 기준 353.8만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861.9만명 중 4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 비정규직은 290.6만명으로 전체 남성 임금근로자 1,100.8만명 중 26.4%
- 성별 비정규직 비중 갭(%p): ('14)13.4 → ('15)13.7 → ('16)14.6

⊙ 여성 비정규직 규모는 2005년부터 남성을 추월하였으며, 최근 6년간 연평균 2.6% 증가한데 반해 남성 비정규직은 동기간 연평균 1.6% 증가

- 특히 여성 시간제 비정규직 규모는 2008년 이후 연평균 9.7% 증가

[그림 4] 성별 비정규직 비중 및 여성 비정규직 유형별 추이

(단위: %)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연령계층별로는 청년층(15~29세)과 장년층(50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미성년층(15~19세)와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소폭 확대

⊙ 2016년 기준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34.9%, 50대는 34.0%, 60세이상은 68.2%로 전체 비정규직 비중(32.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30대와 4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비정규직 비중에 비해 낮고 최근 들어 하락하는 추세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규모는 2016. 8월 기준 60세 이상 146.8만(22.8%), 50대 138.2만(21.5%), 15~29세 청년층 132.3만(20.5%), 40대 127.7만(19.8%), 30대 99.4만(15.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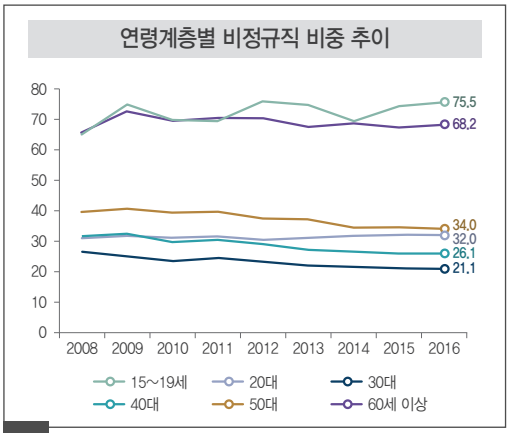
성별 ·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40대와 50대에서 남녀 비정규직 비중 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전체 남녀의 비정규직 비중 갭은 14.6%p인데 반해 40대는 18.2%p, 50대는 20.5%p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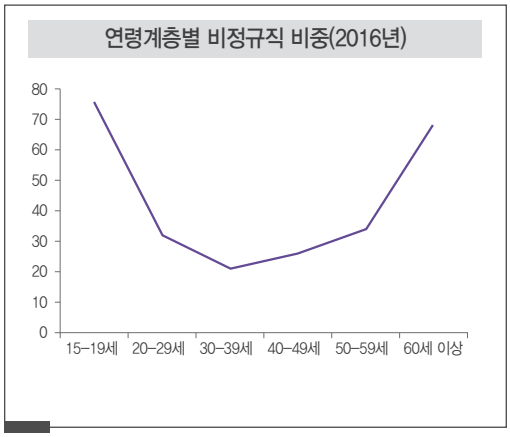
⊙ 여성의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중(2016년 기준,%): 15~19세 74.8, 20대 32.2, 30대 29.2, 40대 36.6, 50대 45.8, 60세이상 74.6

[그림 5]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분포 및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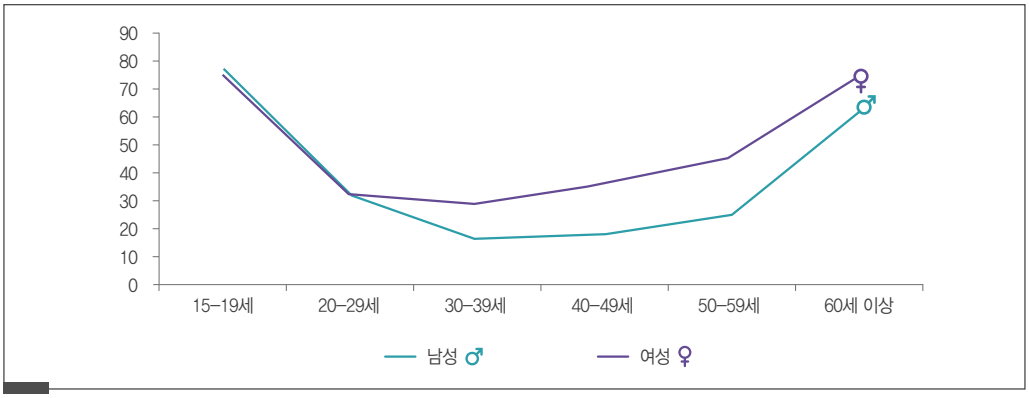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그림 6] 성별 ·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2016년 기준)

(단위: %)



주: 2016.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03

비정규직 고용의 산업별·사업체규모별 특성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시간제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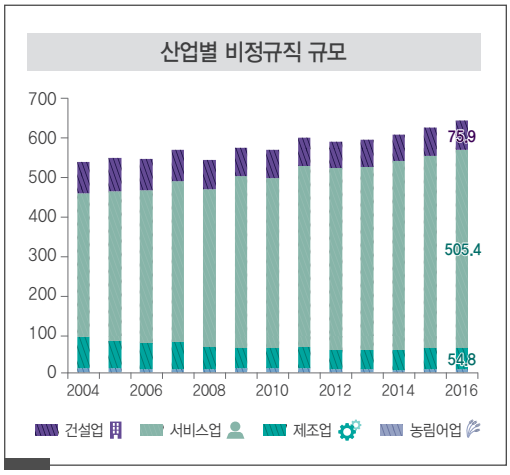
⊙ 최근 6년간 산업별 비정규직 증가(매년 8월 기준, 전년대비, 연평균, %): 서비스업 2.7%, 제조업 1.0, 건설업 1.0, 농림어업 −6.0

⊙ 2016년 중 서비스업 임금근로자는 32.6만명 증가하였고 그 중 14.7만명이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24.2만, 한시적 근로자 1.5만, 비전형 근로자 −3.4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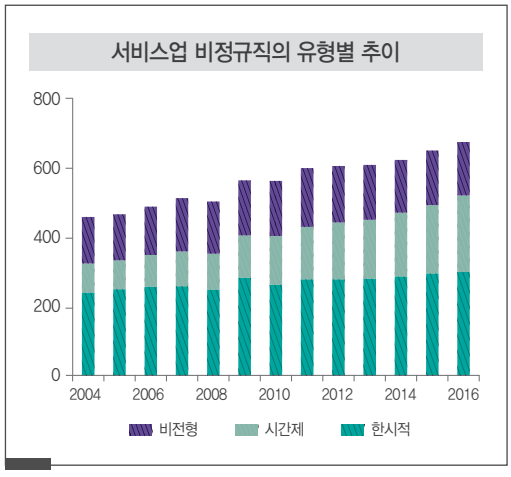
– 서비스업 시간제 근로자는 최근 6년간 연평균 7.9%의 높은 증가세 기록

[그림 7]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단위: 만명)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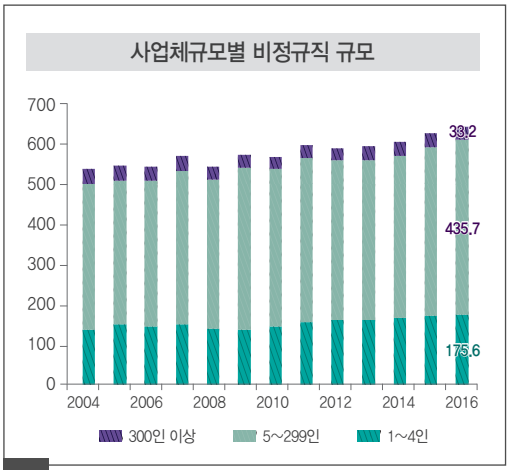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6. 8월 기준): 1~4인 사업체 175.6만명(27.3%), 5~299인 사업체 435.7만(67.6%), 300인이상 사업체 33.2만(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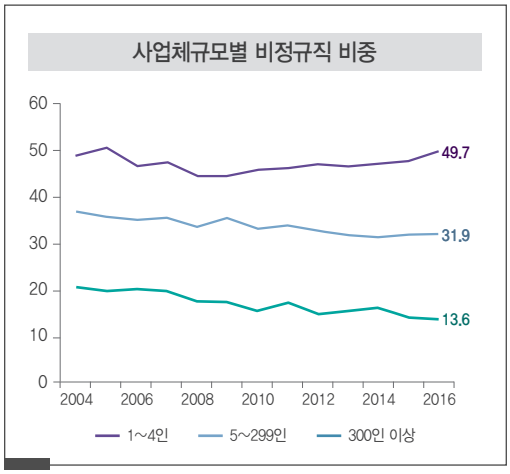
⊙ 동기간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비중은 1~4인 49.7%, 5~299인 31.9%, 300인이상 사업체 13.6%로 나타남

[그림 8]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단위: 만명)



(단위: %)



자료: 통계청

04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 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수준은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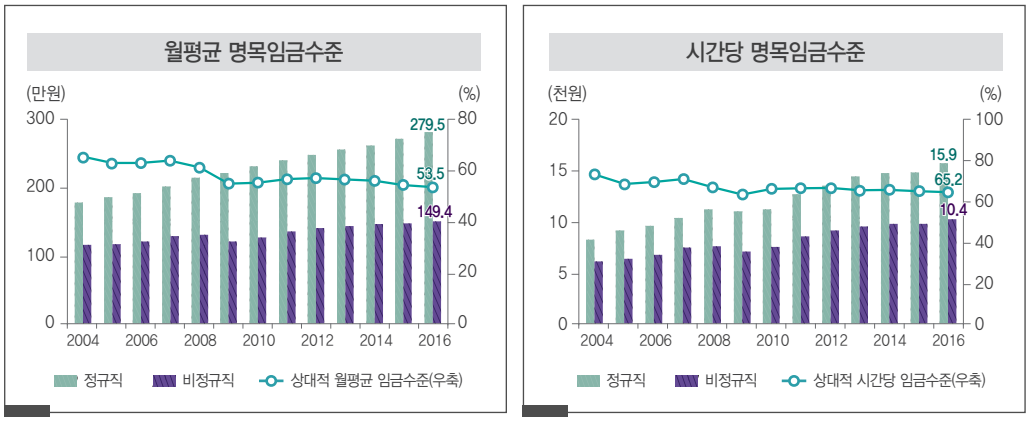
⊙ 비정규직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2016년 기준 149.4만원으로 정규직(279.5만원)의 53.5% 수준이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비정규직의 월평균 명목임금 추이(정규직 대비, %): ('12)56.6 → ('14)55.8 → ('16)53.5

⊙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명목임금도 2016년 기준 10.4천원으로 정규직의 15.9천원의 65.2% 수준으로 하락

– 비정규직의 시간당 명목임금 추이(정규직 대비, %): ('12)67.4 → ('14)66.2 → ('16)65.2

[그림 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비교



주: 시간당 명목임금 = 월평균임금/월평균근로시간
자료: 통계청

비정규직의 근로 복지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주요 사회보험가입률도 최근 들어 하락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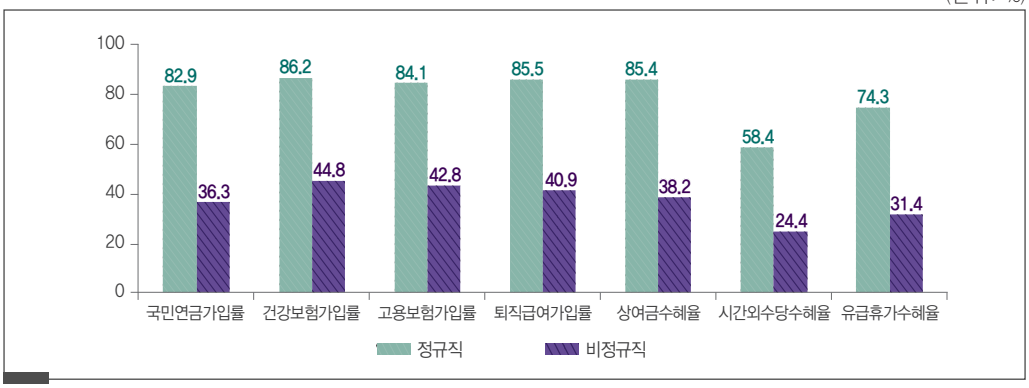
⊙ 비정규직의 주요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오히려 소폭 하락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가입률은 36.3%, 건강보험가입률은 44.8%, 고용보험가입률은 42.8%(2016년 기준)로 저조하며 지난 2013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
-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3대 사회보험가입률은 각각 15.3%, 19.3%, 20.9%로 저조하여 사회복지 취약계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음

⊙ 비정규직의 퇴직급여가입률, 상여금수혜율, 시간외수당수혜율, 유급휴가수혜율 등의 근로복지 지표도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그림 10]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 및 근로복지 수혜율(2016년 기준)

(단위: %)



자료: 통계청

05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어 33%대 근접하였고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2.2% 증가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유형별 증가율(연평균, %): 시간제 9.3, 한시적 1.4, 비전형 0.6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정규직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근로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근로계층은 더욱 증가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중고령층과 여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

⊙ 주된 직장에서 은퇴연령이 빨라지고 있는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증가

- 현재의 추세라면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 이후에는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

⊙ 여성근로자가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 높음

-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며 40대와 50대에서 남녀 비정규직 비중 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도 35%에 달하고 비정규직 규모도 최근 3년간 연평균 3.2% 증가

⊙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체 서비스업에서의 시간제 비정규직이 가파르게 증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용안정화 대책이 필요

⊙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과 사회보험가입률, 근로복지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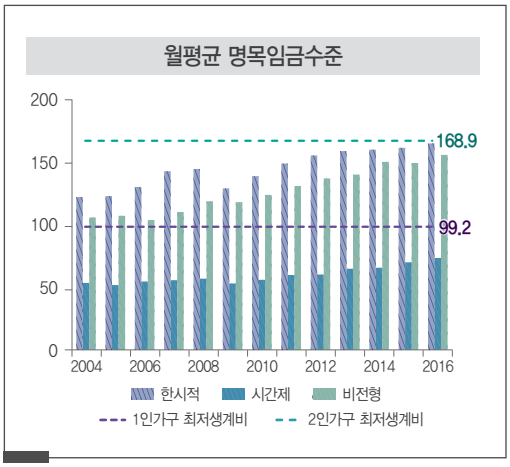
– 시간제 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을 개선하고 사회보험의 법적인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4.1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2017년 기준 99.2만원)[3]에 미치지 못하며 시간당 명목임금도 8,300원으로 한시적(9,600원), 비전형 근로자(10,900원)에 비해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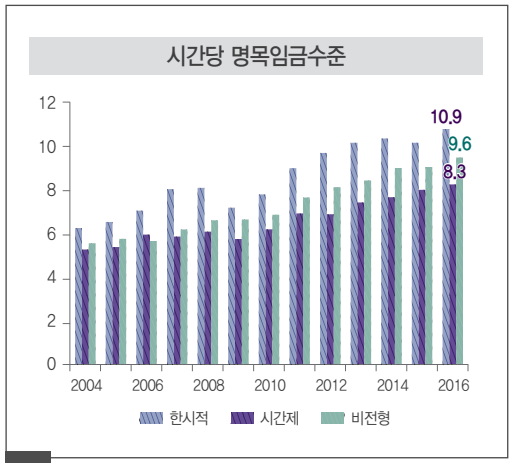
– 비정규직 전체의 월평균임금(149.4만원) 수준은 2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그림 11] 비정규직 유형별 명목임금수준

(단위: 만원)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 서비스업 중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고령층, 청년층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필요

– 일정 기간 이상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금을 보조해주는 등의 유인책 고려

– 고용 형태별 평균근속기간(2016년 기준, 개월): 정규직 89, 비정규직 29(한시적 30, 시간제 20, 비전형 30)이며 시간제 근로자의 66.0%가 1년 미만 근무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공급 확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여성 및 중고령층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17년 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는 1인가구 99.2만원, 2인가구 168.9만원, 3인가구 218.5만원, 4인가구 268.0만원임

Ⅲ

주택시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변동요인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박승호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53**

최근 전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도 확대

⊙ 전년말대비 2017년 5월 기준 전국 및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0.15%, 0.27%

- 2017년 들어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대비 2017년 5월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22%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도 상승세

- 전년말대비 2017년 5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0.11%, 수도권은 0.25%
- 전세가격 상승으로 2014년 1월 61.2%였던 전국기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이 2017년 5월 68.2% 수준으로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주택시장은 점차 주택수요가 둔화세로 전환되어 하방리스크가 점증할 전망

⊙ 2012년 이후 핵심 주택수요 계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 우리나라는 35~54세 인구비중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식의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

⊙ 가계부채 급증과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확대도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

국내 주택금융의 경우 단기간 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환경여건 악화가 예상되므로, 주택금융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

⊙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전반적 리스크의 회피보다는 엄격한 차주신용도 평가에 기반한 주택금융 취급이 바람직

⊙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자료 제약 등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투명성도 부족해,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

⊙ 한편, 실수요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대응안도 마련할 필요

- 주택소비·수요 행태도 주택수요 핵심계층 변화, 기술발전으로 기능·편의성 중심으로 다양화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01

주택 시장동향 및 주요 특징

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

최근 전국 주택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도 확대

⊙ 2017년 5월 기준 전년말대비 전국 및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0.15%, 0.27% 상승

⊙ 2017년 들어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7년 5월 전월대비 0.22%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2017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월대비): 0.03%(1월) → 0.04(2월) → 0.10(3월) → 0.14(4월) → 0.22(5월)

⊙ 전국의 아파트가격도 2월 보합세를 보인 이후 3월, 4월, 5월 각각 0.02%, 0.03%, 0.05% 상승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도 점진적인 상승세

⊙ 2017년 1~5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0.11%, 수도권은 0.2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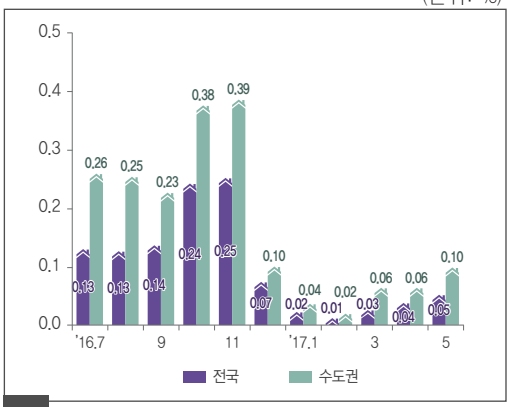
– 서울 0.32%, 6개 광역시 0.24%, 부산 0.69% 상승

⊙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2014년 1월 61.2%였던 전국기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이 2017년 5월 68.2% 수준으로 높아짐

– 수도권의 매매가격대비 대비 전세가격 비중도 2014년 1월 58.9%에서 2017년 5월 69.8%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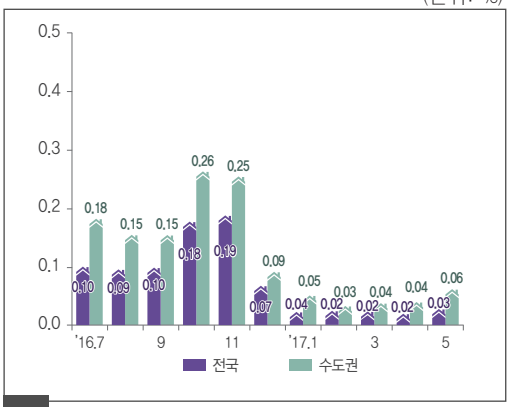
[그림 1]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



[그림 2]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KB금융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분양실적은 지역별로 차별화

⊙ 3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한 6만 1,679호

⊙ 울산, 대전, 인천, 경남, 광주 등의 미분양 주택은 전년말대비 20%이상 증가

–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전년말대비 6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대전, 인천 등도 각각 55%, 47%의 높은 증가율 기록

⊙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등은 미분양이 감소

– 서울 지역의 미분양은 전년말대비 27% 감소하였으며 부산, 대구도 각각 18%, 32% 감소

세계 주요국 주택가격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큰 폭의 하락 · 회복 패턴을 보였으나, 국내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조정만 거치고 점진적 상승기조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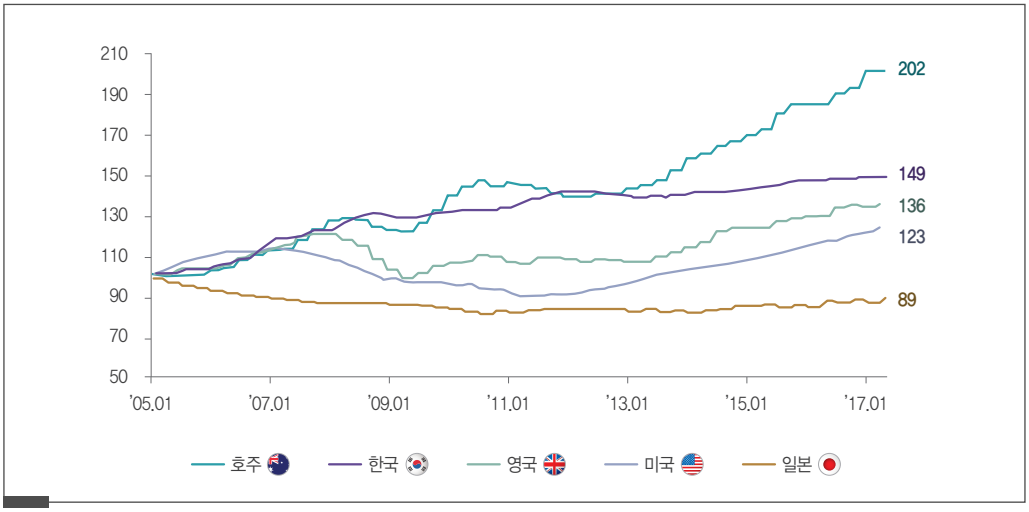
⊙ 일본 주택가격이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위기이전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

⊙ 2005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49%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안정세

– 호주 주택가격은 2005년 이후 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영국은 36%, 미국은 23% 상승

[그림 3] 주요국 주택가격 추이

(단위: '04년 말=100)



자료: 블룸버그 등

나. 주택시장의 주요 특징

1) 주택 거래의 차별화

도시지역과 지방간 선호도 차이가 확대되며 주택가격이 차별화

⊙ 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지방의 주택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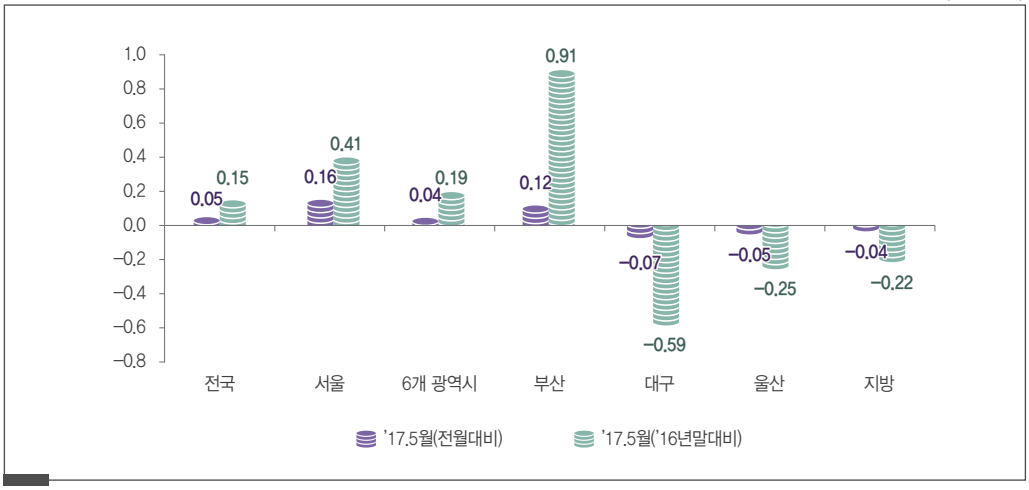
– 수도권, 광역시의 집값은 2017년 5월기준 전년말대비 각각 0.27%, 0.19% 상승한 반면 지방의 주택가격은 0.22% 하락

⊙ 한편, 광역시내 주택가격 상승률도 큰 격차를 보이며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집중되는 특징

– 광역시 중 부산이 2017년 5월기준 전년말대비 0.91% 상승한 반면 대구, 울산은 동기간 0.59%, 0.25% 하락

[그림 4] 주요지역 주택가격 상승률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비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거래도 차별화

⊙ 2017년 3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7년초 대비 32% 증가한 가운데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매매거래 증가율이 아파트 거래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아파트거래 증가율이 27%를 기록한 반면 연립주택 거래량은 59%, 다세대주택 49%, 단독주택은 47% 증가

⊙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거래량 확대는 전세난 가중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구매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세입자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선택했을 가능성

[표 1] 3월 주택 매매거래 거래건수 증가율

(단위: %)

구분	전체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율	32.1	46.6	49.0	59.1	27.3

※ 주택매매거래 증가율은 1월 주택매매 거래건수 대비 3월 주택매매거래 증가율

자료: 건설교통부

2) 월세거주 비중 확대

서울지역 가구주의 월세거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

⊙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월세거주 비중은 2010년 6%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10% 수준으로 상승

– 동기간 주택 자가비중도 48.9%에서 52.7%로 확대

⊙ 반면 전세비중은 2010년 45% 수준에서 2016년 37%로 빠르게 감소

⊙ 이는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주택보유자들이 임차유형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데 기인

서울지역 세대별 월세비중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30대의 월세거주 비중이 가장 빠르게 상승

⊙ 서울지역 30대 가구주의 월세거주 비중은 2010년 6.7%에서 2016년 16.7%로 지난 6년간 2.5배로 상승

– 반면 전세거주 비중은 동기간 20%p를 상회하는 감소

– 자가거주 비중은 2010~2016년 기간 13.3%p 증가하였는데 월세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가구가 낮은 금리를 기반으로 주택매입에 나서고 있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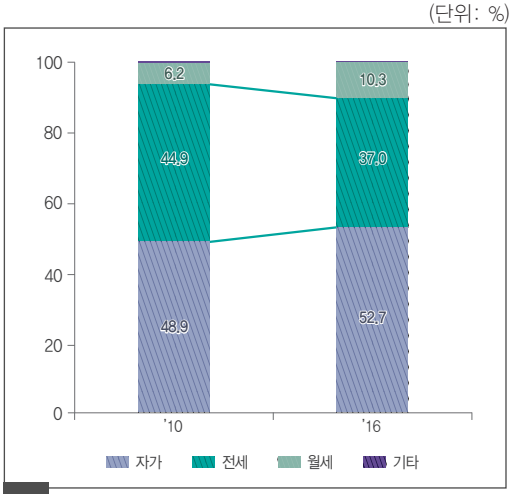
⊙ 40대, 50대의 월세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40대와 달리 50대의 경우 자가비중이 하락세

– 50대의 자가비중은 2010년 66% 수준이었으나 2016년 60.9%로 5.1%p 하락

– 40대 월세비중은 2010년 4.1%에서 2016년 8.5%로 50대는 4.5%에서 7.4%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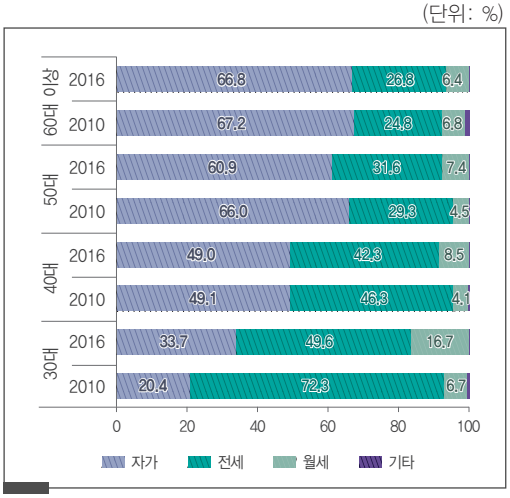
[그림 5] 서울 가구주 거주유형 변화 추이

(단위: %)



[그림 6] 서울 가구주세대별 거주유형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서울서베이

02

주택시장의 주요 변동요인 점검

주택의 주요 수요계층인 35~54세 인구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우리나라의 35~54세 인구는 2011년 1,673만명을 정점으로 2020년 1,602만명, 2030년 1,426만명 수준으로 지속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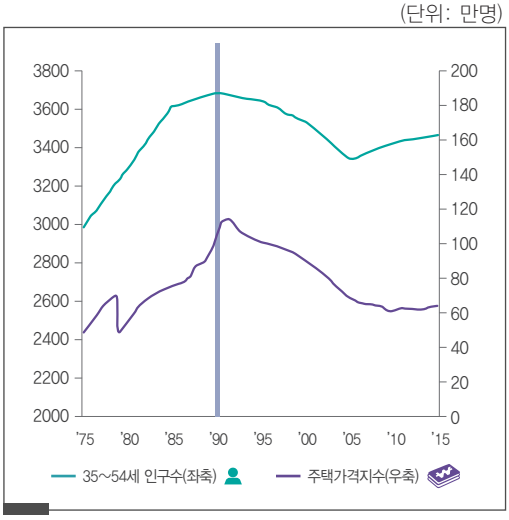
- 35~54세 인구비중(%): 33.7('10년) → 31.1('20년) → 27.3('30년)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35~54세 인구 감소와 함께 주택가격 급락을 경험

- 일본의 35~64세 인구는 1980년대말 3,680만명 수준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15년 3,460만명 수준으로 감소
- 일본 35~54세 인구비중(%): 29.8('90년) → 27.8('10년) → 27.6('15년)

[그림 7] 일본 35~54세 인구와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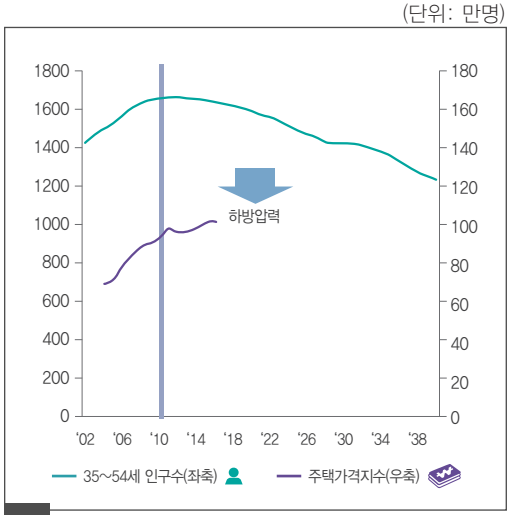
(단위: 만명)



자료: 일본통계청, 블룸버그

[그림 8] 한국 35~54세 인구와 주택가격 추이

(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 한국은 35~54세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가격 하방압력은 일본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표 2] 일본 주택가격 하락기와 향후 국내 여건 비교

	일본	한국
경제성장률(%)	1.0('91~'10년)	2.8('21~'30년)
35~54세인구비중(%)	29.8('90) → 26.9('10)	32.2('17) → 29.8('23)

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이용

주택 수급측면에서는 주택보급률 및 자가보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

⊙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이 개선되어 주택 수요초과 현상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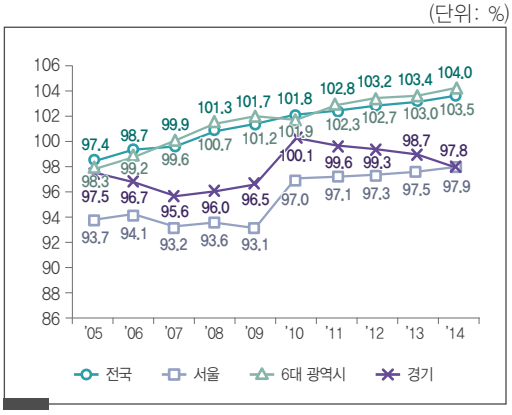
- 주택보급률(%): 97.4('05년) → 101.8('10년) → 104.0('14년)
- 자가보유율(%): 54.2('10년) → 56.8('15년)

⊙ 다만 경기지역 주택보급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

- 경기도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0.1%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97.8%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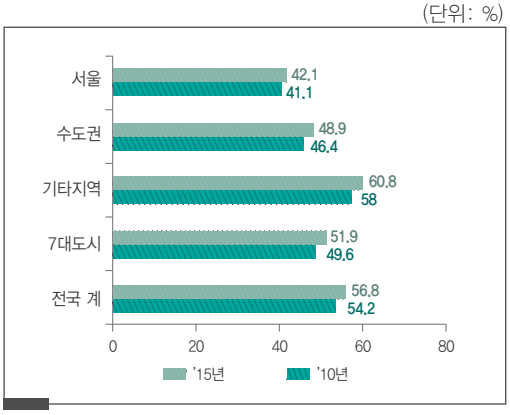
[그림 9] 지역별 주택보급률 추이

(단위: %)



[그림 10] 지역별 주택자가보유율

(단위: %)



자료: 통계청 등

가계부채 급증과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에 따른 가계 부채상환부담 증대도 주택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7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60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증가속도 역시 가파른 상황

–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6년 11.6%로 확대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상승세

– 가계부채/가처분소득(배): 1.28('10년) → 1.44('15년) → 1.53('16년)

⊙ 이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가중되는 상황

–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보유가구 기준 2012년 22.3% 2016년 33.4%로 상승

⊙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기조에 따라 국내 금리상승 압력도 가중될 전망

03 시사점

최근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도 확대

⊙ 2017년 5월 기준 전국 및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6년말 대비 0.15%, 0.27%

- 2017년 들어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2017년 5월 전월대비 상승률은 0.22%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

⊙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도 상승세

- 전년말대비 2017년 5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0.11%, 수도권은 0.25%
- 전세가격 상승으로 2014년 1월 61.2%였던 전국기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이 2017년 5월 68.2% 수준으로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주택시장은 주택수요가 둔화되어 과거와 같은 상승세 보다는 하방압력이 가중될 전망

⊙ 2012년 이후 핵심 주택수요 계층인 35~54세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 가계부채 급증과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에 따른 가계 부채상환부담 증대도 주택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요인

⊙ 주택수급측면에서 주택보금률 및 자가보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

⊙ 반면, 가구 증가세 지속, 노후주택 멸실에 따른 신규 주택수요 등은 가격하락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한편, 국내 주택금융의 경우 단기간 내에 대규모 부실 발생가능성은 낮으나 제반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가 필요

⊙ 전반적 리스크의 회피보다는 차주신용도 평가에 기반한 주택금융 취급이 바람직

⊙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하고, 자료 제약 등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투명성도 약해, 리스크관리 체제 강화를 위한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

- 차주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 통계데이터, 분석기법 등의 인프라 강화가 필요

주거문화·형태는 그동안 가격상승 기대감 중심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변화가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대응안도 마련할 필요

⊙ 주택수요 핵심계층이 1~2인 가구, 고령층 중심으로 변화해 주택 선호도가 변화될 전망

- 1~2인 소형가구 비중(통계청, %): 55.4('17년) → 58.4('20년) → 65.4('30년)

⊙ 주택소비·수요 행태도 주택수요 핵심계층 변화, 기술발전으로 기능·편의성 중심으로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

IV

소비자심리지수 변화와 소비전망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오현희 경제분석관** 연락처 **788-4657**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최근 큰 폭으로 상승

⊙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등을 거치면서 하락세

⊙ 이에 정부는 2015년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활성화대책을 시행하였으나 일시적 효과에 그침

⊙ 2016년 하반기들어 대내외 불안이 확대되며 소비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2017년 중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는 가운데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소비심리가 반등

– 소비자심리지수: ('17.2월)94.4 → (3월)96.7 → (4월)101.2 → (5월)108.0

소비자심리지수는 민간소비에 1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소비전망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간 시차상관분석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1분기 후 민간소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

⊙ 그랜저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최근의 소비심리 회복은 금년 하반기 소비개선을 예상하는 요인이나,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하반기 소비에 긍정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17년 시행중인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도 일시적이나마 소비증가에 기여할 전망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요인 등으로 민간소비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

– 구조적 소비부진의 원인으로는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주거비부담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01

소비자심리지수 변화

가. 소비자심리지수 개요 및 변화 추이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CCSI)는 17개의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

–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1] 중 현재생활형편, 현재경기판단, 생활형편전망, 향후 경기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2]로서 소비자의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

⊙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평균적 경기상황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표 1] 소비자동향 조사항목 및 추이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경제인식	현재생활형편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현재경기판단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경제전망	생활형편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향후경기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취업기회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금리수준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소비지출전망	가계수입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가계저축 및 부채	현재가계저축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저축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현재가계부채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부채전망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물가전망	물가수준전망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
	주택가격전망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
	임금수준전망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
	물 가 인 식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주: 표시한 항목은 소비자심리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1)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로, 개별 소비자동향지수의 값이 100이면 긍정적 또는 증가 및 상승으로 응답한 비중이 부정적 또는 감소 및 하락으로 응답한 비중과 동일하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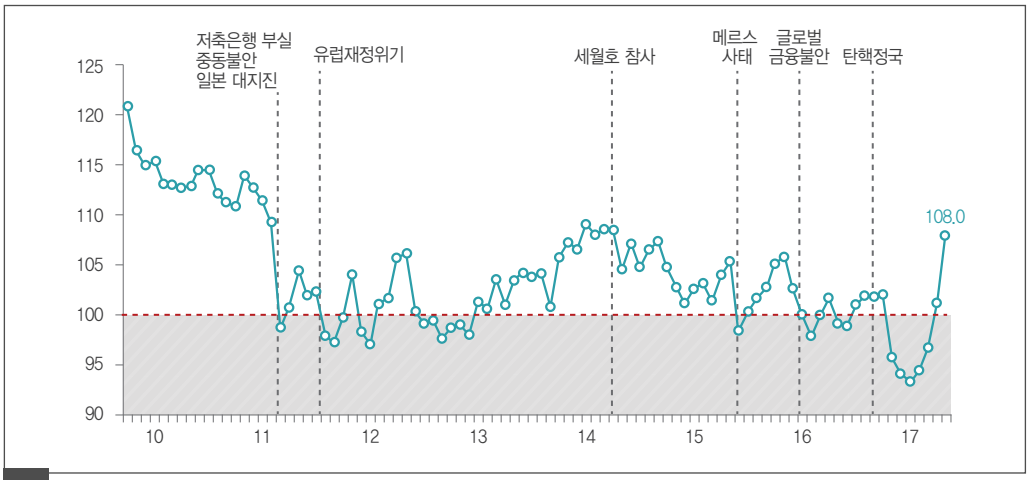
2) 특정 개별지수의 과도한 영향력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시킨 후 개별 표준화지수의 합산지수를 산출하여 이를 표준화한 후 소비자심리지수의 장기평균이 100, 장기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재조정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최근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 120.8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였으며 저축은행부실, 유럽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큰 폭으로 하락

⊙ 이후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사태 등을 거치면서 하락세를 보임

[그림 1]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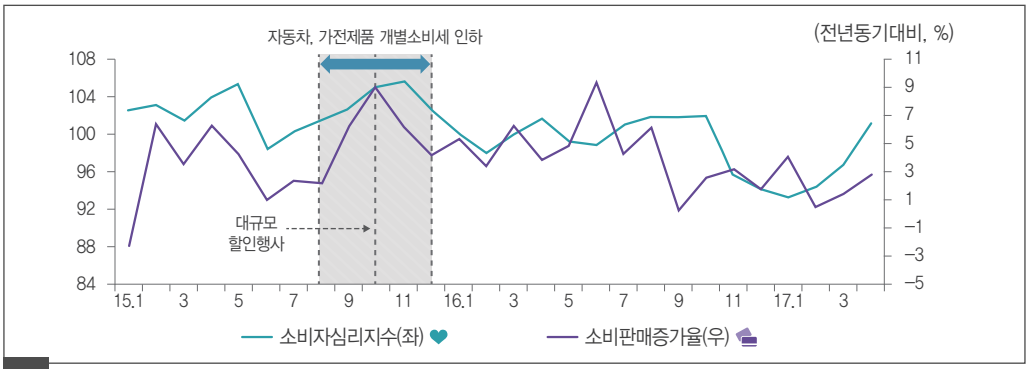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이에 정부는 2015년 하반기 중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활성화대책[3]을 시행하여 소비심리 상승 및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8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소매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0월 중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실시로 소매판매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
- 그러나 대규모할인행사와 개별소비세 인하혜택 종료로 소비절벽 우려가 제기되며 2016년 1월 들어 소비가 큰 폭으로 급감
-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3)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심리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 8월 26일 소비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소비심리의 조기회복을 위한 개별소비세 부담완화,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및 관광·여가 활성화, 정부·기업이 합심한 선도적 소비제고 노력, 주택연금 활성화 및 소비재 수입 경쟁 제고 등

[그림 2] 소비자심리지수 및 소매판매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10월 대내외 불안이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소비자심리지수는 탄핵정국,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새정부 출범과 금리인상, 주요기관의 경제전망 하향조정 등으로 2017년 1월 93.0까지 하락하여 2009년 4월(94.0)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그러나 2017년 들어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 등으로 5월 중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상승
-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8.0을 기록하여 2014년 4월(108.4) 이후 최고치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 ('17.2월)94.4 → (3월)96.7 → (4월)101.2 → (5월)108.0

02

소비자심리지수와 소비간 상관관계 분석

소비자심리지수는 민간소비 및 경기동행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표에 1분기 또는 2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 1996년 2/4분기부터 2017년 1/4분기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와의 시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1분기 후 민간소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심리지수는 당분기 민간소비와는 0.59의 상관관계를, 1분기 후 민간소비와는 0.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비자심리지수가 1분기 후 소비와 높은 관계가 있는만큼 향후 소비전망에 유용한 지표로 나타남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 개별 소비동향지수들도 민간소비에 1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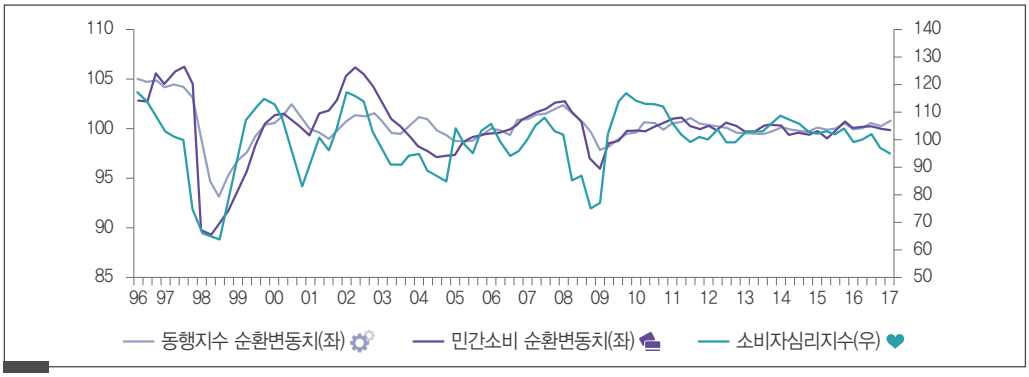
– 특히 구성지표 중 소비와 관련이 높은 소비지출전망지수는 1분기 후 민간소비와 상관관계가 0.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 민간소비와 소비자심리지표(t분기)간 시차상관관계

t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당분기	+1분기	+2분기
소비자심리지수	0.5038	0.6617	0.7327	0.5946	0.2737	–0.0748
현재생활형편	0.5131	0.6321	0.6816	0.5887	0.3310	0.0190
현재경기판단	0.4666	0.5165	0.4786	0.3023	0.0181	–0.2812
생활형편전망	0.4506	0.5831	0.6475	0.4879	0.2074	–0.0159
향후경기전망	0.3745	0.4516	0.4578	0.2795	–0.0102	–0.2913
가계수입전망	0.4897	0.6731	0.7821	0.6638	0.3465	0.0289
소비지출전망	0.5136	0.0789	0.8315	0.7508	0.4695	0.1533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월지수의 분기평균을 사용
2) 민간소비는 계절조정된 실질 민간소비 데이터를 HP 필터(λ=1,600)를 이용하여 추세를 제거한 민간소비 순환변동치를 사용

[그림 3]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4] 순환변동치 보다 2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경기 전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분기 전 소비자심리지수와 0.65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1분기 전과도 0.63으로 높은 관계를 보임

[표 3] 소비자심리지수(t분기)와 경기동행지수간 시차상관관계

t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당분기	+1분기	+2분기
소비자심리지수	0.5579	0.6545	0.6253	0.4257	0.0668	–0.2715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월지수의 분기평균을 사용
2) 민간소비는 계절조정된 실질 민간소비 데이터를 HP 필터(λ=1,600)를 이용하여 추세를 제거한 민간소비 순환변동치를 사용
3) 경기동행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사용

그랜저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서로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

– ADF 단위근 검정결과 각 변수가 안정적 시계열임을 확인

⊙ 1~4분기 시차 적용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모두 기각되어 소비자심리지수가 민간소비를 인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

⊙ 반면, 민간소비가 소비자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아 민간소비가 소비자심리지수를 인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인과관계 검정결과

귀무가설 / 시차	소비자심리지수 ⇏ 민간소비	민간소비 ⇏ 소비자심리지수
1분기	5.495** (0.0231)	1.395 (0.1690)
2분기	4.088** (0.0135)	1.162 (0.3217)
3분기	3.899** (0.0148)	0.949 (0.4252)
4분기	3.354** (0.0183)	1.154 (0.3450)

주: 1) F통계량, ( )안은 p값
2)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4) 경기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7개 지표로 구성됨

03

2017년 소비전망

소비자심리지수가 소비에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의 소비심리 상승세가 하반기 소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소비자심리지수가 민간소비에 1분기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하반기 소비개선에 긍정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1월 소비심리가 저점을 통과한 후 점차 개선됨에 따라 2월부터 소매판매도 증가세를 보임

–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7.2월)0.5, (3월)1.4, (4월)2.8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 또한 일시적이나마 하반기 소비증가에 기여할 전망

⊙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사업'[5]을 시행하고 있어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혜택 종료 이후 감소했던 자동차판매 증가에 기여할 전망

⊙ 2017년 2월에는 소비 · 민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심리제고, 가계 · 자영업 부담 경감, 가계소득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는 구조적 소비제약요인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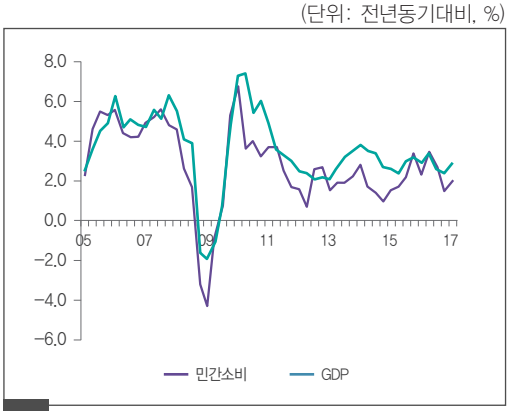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2013년 1/4분기~2015년 3/4분기 까지 11분기 연속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GDP규모 간 괴리도 확대

– 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GDP성장 기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55.7%, 2000~2007년 41.7%, 2010~2016년 37.6%로 하락

5)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사업은 201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시행되는 제도로, 2006년 12월말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교육세·부가세 고려 시 총 143만원)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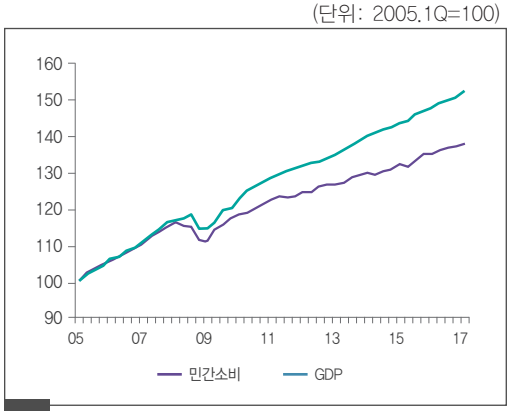
[그림 4] GDP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그림 5] GDP 및 민간소비 추이

(단위: 2005.1Q=100)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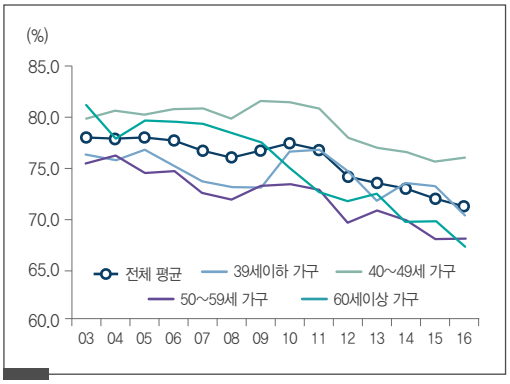
구조적 소비부진의 원인으로는 평균소비성향의 하락,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주거비 부담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임금 및 소득증가율이 정체되고 고용구조가 취약해지는 등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평균소비성향 하락,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소비가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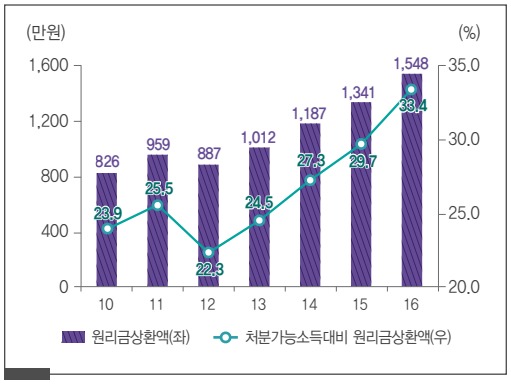
⊙ 생애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노후대비용 예비저축이 증가하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확대되면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평균소비성향이 하락세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
- 최근들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및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로 인한 주거비 상승도 소비제약요인으로 작용

[그림 6]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



[그림 7]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6]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6) 부채보유가구 기준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6월호 통권 제56호

발행일 2017년 6월 22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 국회예산정책처, 2017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nabo Economic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6-001366-07